가상자산거래소 지분 20% 제한… 업계 "재산권 침해" 반발

금융위 '디지털자산업' 정부안
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지분 초과
미래에셋 코빗 인수 등에 '변수'
3년 유예에도 초과 지분 매각 부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거래소들의 지분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기존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래소를 인수하거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안은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가상자산거래소)의 주식소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5대 거래소, 지분 조정 불가피…미래에셋 코빗 인수·네이버 두나무 주식교환도 영향

규제가 현실화하면 주요 거래소의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빗썸은 최대주주 빗썸홀딩스가 73.6%를 보유하고 있어 기본 상한에 맞추려면 지분율을 53.6%포인트 낮춰야 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25.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30.4%,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바이낸스 아일랜드 법인의 지분율이 67.5%다.

거래소 지분 규제는 신규 인수나 지배력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래에셋은 지난 7월 1414억원을 투입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현 디지털엑스)을 인수한 데 이어 자본 확충에도 나섰다. 지난 8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달 16일 약 305억원의 추가 출자를 결정했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율은 98.13%로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지분 상한이 적용되면 미래에셋컨설팅은 98.13%에서 20%까지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도 변수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안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 한도가 적용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외 한도인 34%까지 보유를 인정받더라도 66%포인트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에도 지분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회사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와 예외 승인 여부가 향후 거래 구조의 변수로 꼽힌다.

◆3년 유예에도 초과 지분 우려…가상자산업계 "지분 규제 없애야"

정부는 거래소 지정 이후 3년간 지분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중소형 거래소에는 추가로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이 지분 구조를 조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예기간이 주어져도 대규모 초과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거래소 지분 매각은 일반적인 투자 지분 처분과 달리 경영권과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자 입장에서도 자금 부담과 투자 수익성, 향후 규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내놓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분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최대 34% 예외 승인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도 잠재적 인수 후보군을 좌우할 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매도하는 쪽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런 조건이라면 매도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향후 추가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지분 매각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유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이 적극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본이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지분을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 초기부터 투자와 경영을 통해 형성한 지배구조에 사후적으로 소유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규제"라며 "민간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어렵게 생존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갑자기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상당 부분 매각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의 위헌성과 헌법성 재산권 보호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침해되는 대체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앤트로픽 공모가 하회… 월가는 성장성 '낙관' 종투사 모험자본 11.6조… 플랫폼 첫 출자

그린슈 행사 종료 등 하락 압력
MSCI 글로벌 지수 편입 예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의 주가가 상장 나흘 만에 공모가 아래로 밀려났다. 상장 첫날 30% 넘게 치솟으며 형성된 기대감이 빠르게 식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앤트로픽은 전 거래일보다 5.74달러(6.5%) 내린 81.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 상장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공모가인 83달러를 밑돌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앤트로픽의 시가총액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완전 희석 기준으로 약 1조5000억달러(약 2014조원)다.

최근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도 앤트로픽이 상승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전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복귀 소식에 AI 관련주가 급등했지만 앤트로픽 주가는 오히려 1.4% 하락했다.



지난 2월26일 미국 뉴욕의 컴퓨터 화면에 앤트로픽의 홈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된 모습. /뉴시스

초대형 IPO가 상장 직후 공모가를 하회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는 상장 후 22거래일 만인 7월 15일 장중 처음으로 공모가 135달러를 하회했고,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도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2012년 페이스북은 상장 이틀째, 2019년 우버는 상장 첫날, 2023년 Arm은 상장 6거래일째 공모가를 밑돌았다. 올해 7월 상장한 SK하이닉스 ADR도 12거래일 만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앤트로픽의 향후 주가에는 내부자 매물 출회 가능성과 주가 방어 수단 소진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과 내부 투자자의 지분 매도가 상장 첫날부터 가능하고, 실적 발표에 따라 매도 물량도 늘어난다. 여기에 인수단의 초과배정옵션(그린슈) 행사로 공모가 아래에서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여력도 사라졌다.

반면 지수 편입은 새로운 매수 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앤트로픽은 오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MSCI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다. 지수 리밸런싱 분석업체 인트로픽은 패시브 펀드가 연말까지 앤트로픽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월가의 기업가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다. 캐나코드제뉴이티는 이날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5달러를 제시했다. 오펜하이머는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와 목표주가 150달러를 제시했다. 앞서 웨드부시도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120달러로 내놓은 바 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울산 벤처펀드에 출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액이 11조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와 벤처투자조합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첫 출자 사례가 나왔다. 증권사가 플랫폼에서 투자할 펀드를 찾고 운용사들의 제안서를 비교해 실제 출자까지 결정한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종투사 7곳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의무비율 산정 기준 11조6184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조9717억원 늘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공급비율은 19.5%로 올해 의무비율인 10%를 웃돌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IMA·발행어음 사업자 3곳과 KB·하나·키움·신한투자증권 등 발행어음 사업자 4곳이다.

이번에 첫 출자가 성사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은 금감원과 네이버페이가 증권사의 투자처 발굴을 돕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구축한 서비스다. 증권사는 플랫폼에 펀드 출자를 공고하고, 운용사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같은 양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벤처기업도 기업 정보와 투자 유치 자료를 올려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다.

실례로 KB증권은 이 플랫폼에 출자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검토한 뒤 울산 소재 유니스트기술지주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조합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관광 사업 등 동남권 초기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출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4일 기준 플랫폼에는 증권사 19곳과 운용사 155곳, 중소·벤처기업 733곳 등 총 936개 회사가 가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자주총 의무화 앞두고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1월 적용… 해킹 등 대비책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앞두고 법무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호텔에서 '2026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자주총에 대해서도 해킹과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주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로 통신장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회사 내부에 전자주총 관리 조직과 총괄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영상·음성·자료화면을 동시 송출할 물적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토스증권, 한 달 주가 흐름 한눈에 본다

'AI 시그널' 고도화

토스증권이 종목별 주가 변동을 개별 뉴스가 아닌 한 달간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AI 시그널'을 고도화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인 시점과 관련 이슈를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보유하거나 관심 등록한 자산의 가격이 변하면 분석 내용을 알림으로 전달한다.

25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새로 도입한 '최근 주가 흐름' 기능은 지난 한 달간의 주요 주가 변동과 관련 이슈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한다. 토스증권은 기사량과 주제의 신규성, 주가 등락과의 연관성 등을 평가해 주요 정보를 선별한다. 인공지능(AI)은 해당 기간의 변동 요인을 종합해 요약한다.

가격 변동 알림 대상도 넓혔다. 보유·관심 종목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관심 등록한 지수, 원자재, 가상자산 등의 가격이 움직이면 등락률과 AI가 분석한 변동 원인을 안내한다. 이용자는 알림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